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4절 북한인권·환경문제 개선 노력

제4장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

남북 분단상황이 반세기를 경과함에 따라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노력해 왔다. 고령 이산가족들에게 시급한 생사·주소확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상시적인 서신교환과 상봉 확대 등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제도화를 위해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 여러 형태의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여 왔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도 부터는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지역에서 설, 추석 명절과 6·15 남북공동선언일을 계기로 3차례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상 상봉 정례화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합의 등 교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1. 당국차원의 교류

가. 이산가족 상봉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이후 2003년까지 8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실시하여 8,045명의 이산가족들이 상봉의 기회를 가졌다. 2000년 8월 1차 상봉부터 2001년 2월 3차 상봉까지는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상봉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2002년 4차 상봉부터는 금강산에서 순차 상봉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에는 설, 6·15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추석 등을 계기로 3차례의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에도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2차례 이루어져 현재까지 10차례의 상봉행사를 통해 총 9,977명이 상봉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부터 남북관계가 냉각되면서 상봉행사 실시가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현황 】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85	'00	'01	'02	'03	'04	총계
생사확인		65	792	744	261	963	681	3,506
서신교환			39	623	9	8		679
방남상봉		30	201	100				331
방북상봉		35	205	100	398	598	400	1,736

(1) 제9차 이산가족 상봉

2004년 2월에 개최된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3월말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산가족 상봉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먼저 재남 가족 486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4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3명이 재북가족 235명을 상봉하였으며 북측에서도 최초로 동반가족 1명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2) 제10차 이산가족 상봉

2004년 5월에 개최된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6월에 금강산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이 쌍방 적십자간 접촉을 통해 일정 등을 재확정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6월 5일부터 7일간 평양에서의 남북적십자간 접촉을 통해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우리측 이산가족 100명과 동반가족 49명이 먼저 재북가족 237명을 상봉하고, 이어서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북측 이산가족 100명이 재남가족 486명을 상봉하였다.

2004년도에 실시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산가족상봉

【 2004년 이산가족 상봉현황】

구 분	9차 상봉	10차 상봉
일정	3.29~4.3	7.11~16
상봉 횟수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송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송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참관	삼일포(금강산)	현대문화회관 교예단 공연관람(금강산)
상봉 가족수	남측 147명이 재북가족 235명 상봉 * 남측 가족보호자 동반 47명 북측 101명이 재남가족 486명 상봉 * 북측 가족보호자 동반 1명	남측 149명이 재북가족 237명 상봉 * 남측 가족보호자 동반 49명 북측 100명이 재남가족 471명 상봉
기타	방북단에 납북자 가족1명, 국군포로 가족 1명 포함	방북단에 납북자 가족 1명, 국군포로 가족 1명 포함

나.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정부는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생사·주소확인 등 시급하고도 손쉬운 사안부터 추진하면서, 나아가 서신교환과 상봉, 재결합으로 확대되어 이산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은 이산가족 교류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측은 이산가족찾기 신청자 수가 10여만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 빠른 시일내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북측과의 각종 회담과 접촉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하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2000년 개최된 제2차 적십자회담에서 시범적인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에 합의한 이후, 2001년도에 2차례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통해 2,267명, 1차례 서신교환사업을 통해 남북 각각 300명씩 600명이 서신을 교환하였다. 그러나 이후 북측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10차례의 이산가족방문단 교환과정에서 총 21,679명이 생사를 확인하였으며 2차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한 2,267명을 포함하면 총 23,946명이 생사를 확인하였다. 서신교환은 1차례 시범사업에서의 600건과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79건 등 총 679건이 이루어졌다.

다.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정부는 현행 이산가족 교류방식으로는 단기간내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 기회를 갖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0년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부터 상설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북측에 제의하였다. 그 후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면회소를 우리측이 전담하여 건설하고 관리·운영 하기로 북측과 합의하여 2004년부터 설계 등 사전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다.

현재 측량 및 지질조사 등 현장에서 실시하여 할 분야를 제외하고는 설계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향후 현장작업을 위한 북측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2005년 부터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빠른 기간내에 시설을 완공함으로써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민간차원의 교류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1988년 「7.7선언」 이후 조금씩 증가되어 왔다. 정부는 당국차원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보다 촉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이산가족들의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은 5년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산가족 1세

대는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사확인 80만원, 상봉 180만원, 교류 지속경비 40만원 등 교류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비지원 회수도 종전의 1 회에서 최대 3회까지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노력으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상당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9년 민간차원의 교류가 시작된 이래 2004년 12월말 현재까지 이산가족들의 재북가족 접촉승인은 총 17,437건으로 이중 19%인 3,322건이 제3국을 통해 생사가 확인되었으며, 1,441 가족이 제3국에서 상봉하였다.

1998년부터는 개별적인 방북상봉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04년 12월말 현재까지 총 25건이 성사되었다. 2004년 한해 동안에는 생사확인 209건, 서신교환 776건, 제3국 상봉 187건, 방북상봉 1건이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는 주로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 국내 민간주선 단체, 언론매체, 동향인 등의 주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류의 중개지역은 초기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매년 각 지역을 방문하여 이산가족 정책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광주, 전주, 대구, 속초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다.

【 연도별 이산가족 교류 현황 】

(단위 : 건)

구분 \ 연도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총계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3,322
서신교환	44	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9,388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1,441
방북상봉									1	5	4	5	5	4	1	25

3.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2004년 12월 현재 휴전이후 납북된 자 중 미귀환자는 48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6.25전쟁 기간중 납북자는 당시 통계연감에 따르면 8만여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 기간중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실향사민 등록에는 7,034명이 등록을 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6.25참전 행방불명자(실종자)를 1만9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미송환 국군포로가 상당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볼 때 2004년말 현재 국군포로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48명이 탈북과정을 거쳐 귀환하였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대북 설득 노력 등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세차례 남북장관급회담과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03.11.4~6)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들의 생사·주소 확인작업을 진행할 것을 북측에 강력히 제기하였다.

다만, 북측이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산가족교류에 포함시켜 생사확인·상봉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접근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도 제9~1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5가족 21명이 상봉한 것을 포함하여 그간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19가족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이 상봉하였으며, 88명의 생사를 확인하였다.

한편, 정부는 납북자가족모임, 납북자가족협의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납북자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 및 정부정책 설명 기회를 수시로 갖는 등 관련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였다.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에 대한 지원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과 북한주민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동포애 정신을 구현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화해협력의 실현이라는 실용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북한주민의 생활고를 덜어주고 우리의 동포애를 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으로도 지원대상국의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 범위내에서 성의껏 돕는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식량사정, 남북관계 상황,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대북지원 현황 】

(단위 : 만불)

구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누계
한 국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7,863	7,045	8,375	8,702	73,594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513	6,494	5,117	7,061	42,477
	계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6	13,539	13,492	15,763	116,071
국제 사회	5,565	9,765	26,350	30,199	35,988	18,177	35,725	25,768	13,932	16,323	217,792
총계	28,790	10,225	31,073	33,384	40,676	29,553	49,264	39,260	29,695	41,943	333,863

1. 정부차원의 지원

가. 직접 지원

정부는 비료·종자·농약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북한 식량난의 근원적 해결에 도움이 되고 지원의 효과와 분배투명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1999년에는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최초로 정부가 구입한 비료 및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여 구입한 4만톤 등 총 15만 5천만톤의 비료를 지원하였다. 이후 2000년도에 20만톤, 2001년에 20만톤, 2002년과 2003년에 30만톤의 비료를 당국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04년에도 당국차원에서 총 30만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북한은 제 13차 남북장관급회담(2.3~6)에서 봄철 비료 지원을 요청해왔으며 2월 25일 북한 적십자사 위원장 명의로 재차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복합비료 16만톤, 요소비료 2만 8천톤, 유안비료 1만 2천톤 등 20만톤을 남북적십자간에 합의된 절차에 따라 전달하였다. 북한 적십자사는 6월 28일 우리측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여 왔다.

또한 북한적십자사가 9월 1일, 10월 4일, 10월 12일 등 3차례에 걸쳐 비료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정부는 10만톤 추가지원을 결정하고 복합비료 8만 1천톤, 요소비료 1만 4천톤, 유안비료 5천톤을 남북적십자간 합의된 절차에 따라 11월부터 12월까지 전달하였다. 이에 북한적십자사는 12월 24일 지원에 대해 감사표시를 전달해 왔다.

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5년부터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1995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995년 대북지원을 시작

한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북한의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해왔다.

정부는 2001년부터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도 옥수수 10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2월말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2005년 2월말까지 전달을 완료할 예정이다. 옥수수 포대에는 우리 정부가 WFP를 통해 지원하는 물자임을 한글과 영문으로 표기하였다.

한편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가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말라리아 발병 확산이 심각히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말라리아 방제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1년, 2002년 말라리아 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국제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2003년에도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사업을 지속하여 30만명분에 해당되는 약품과 기자재를 지원하였다. 2003년 11월 상해에서 개최된 WHO 말라리아관리 워크숍에 참석한 북측관계자는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우리측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정부는 2004년에도 말라리아 방제사업을 지속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해서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등에 50만불을, 2004년에는 어린이 영양식과 의약품 지원을 확대하여 100만불을 지원하였다.

【 정부차원 대북지원 현황 】

(2004. 12. 31 현재, 일부는 정산중)

기 간	지원 규모	지 원 내 역
1995년	2억3,200만달러	- 국내산 쌀 15만톤 직접지원 - 1,850억원(1\$당 800원 적용)
1996년	305만달러	- WFP 200만달러(혼합곡물 3,409톤) - UNICEF 100만달러(분유 203톤) - WMO 5만달러(기상자재) - 24억원(1\$당 790원 적용)
1997년	2,667만달러	- WFP 600만달러(혼합곡물 9,852톤) - UNICEF 34만달러(ORS공장비용) - WFP 1,053만달러(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 UN기구 980만달러 - WFP 400만달러(CSB 8,389톤), UNICEF 360만달러(분유 781톤), WHO 70만달러, UNDP 120만달러, FAO 30만달러 - 240억원(1\$당 900원 적용)
1998년	1,100만달러	- WFP 1,100만달러(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 154억원(1\$당 1,400원 적용)
1999년	2,825만달러	- 비료 11.5만톤 직접지원 - 339억원(1\$당 1,200원 적용) - 한적 및 정부 비료지원(3.30~6.22) 총 15.5만톤462억원
2000년	7,863만달러	- 비료 30만톤 직접지원 - 944억원(1\$당 1,200원 적용)
2001년	7,045만달러	- 내의 150만벌 직접지원(353만달러/46억원) - 비료 20만톤 직접지원(4,921만달러/638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25만달러/223억원) - WHO를 통해 말라리아방제 지원(46억원/6억원) - (1\$당 1,296원 적용)
2002년	8,375만달러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739만달러/234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59만달러/8억원) - 비료 30만톤 지원(6,577만달러/832억원)
2003년	8,702만달러	- 비료 30만톤 지원(6,698만달러/836억원) - WFP를 통해 옥수수 10만톤 지원(1,619만달러/191억원)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66만달러/8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50만달러/6억원)
2004년	11,512만달러	- 비료 30만톤 지원(8,851만달러/1,028억원 상당) - WFP를 통한 옥수수 10만톤 지원(2,400만달러/264억원 상당) - WHO를 통한 말라리아방제 지원(67만달러/7.5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의약품 지원(100만달러/12억원) - 용천재해 긴급구호 및 WHO 지원(94만달러/11.3억원)

2. 민간차원의 지원

민간차원에서는 1995년 이후 2004년말까지 총 5,109억원 상당을 지원하여 인도적 차원의 지원총액 13,012억원 상당의 37%에 달하고 있다. 초기의 민간지원은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1997년 5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496만 달러(39억 7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제1차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지원도 남북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지원창구는 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운영하였다. 1997년 6월 남북적십자사간 합의에 의해 구호물품이 지원되기 시작한 이래로 1998년 12월까지 총 433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이 대한적십자사 창구를 통해 지원되었다.

1999년부터는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민간단체도 독자창구로서 지원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민간단체 독자창구는 1999년 10개 단체로 시작한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말 현재 33개 단체가 활발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액은 5,109억원으로서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40억원(0.8%),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499억원(29.3%), 독자창구를 통해 3,570억원(69.9%)을 각각 지원하였다. 2004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41억원, 독자창구를 통해 1,220억원 등 총 1,661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대북지원의 내용도 초기의 식량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농업개발·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발전하였으며,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전문의약품·의료기기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분야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 7개 단체(7개 사업) 33.8억원, 2001년 12개 단체(15개 사업) 38.4억원, 2002년 14개 단체(18개 사업) 54.5억원, 2003년 16개 단체(16개 사업) 75.3억원, 2004년 23개 단체(25개 사업) 88.7억원 등 5년간에 걸쳐 총 290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이 같은 정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지원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분배확인 및 사업협의 등을 위한 방북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직항로를 통한 민간단체 기증자의 현장확인 형식의 방북 4차례 921명을 포함하여 1,715명이 방북하였고 2003년에는 5차례 674명의 직항로를 통한 방북을 포함하여 1,670명이 방북하였다. 2004년에는 2차례 203명의 직항로 방북을 포함하여 총 1,950명이 방북하여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간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하였다.

정부와 민간은 대북지원이 10년째로 접어들면서 대북지원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4년 9월 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민협」 상임운영단체와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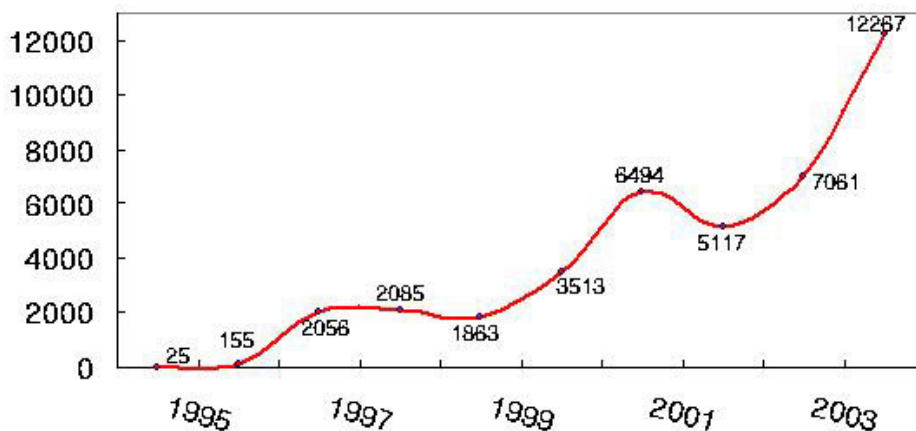
민관정책협의회는 민간과 정부간 포괄적 지원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협의 틀로 민관이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상호 보유한 지원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민간단체 주요 지원분야 】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보건 의료	결핵퇴치, 병원 현대화(어린이심장병센터 설치) 지원, 제약설비(정제·시럽제·환제 등 생산설비) 지원, 제약공장 복구(수액제공장 건설) 지원, 의료가자재 지원, 의약품(항생제·구충제·영양제 등) 지원
농업 개발	옥수수 종자개량 증산 지원, 감자종자 개량·생산(씨감자 재배시설 운영), 젖소 닭목장 설치 운영, 산란종계장 설치 운영, 젖염소 종축 유가공설비 지원, 채소온실 설치 운영, 농기계수리공장 건설 운영, 묘목생산시설(양묘장) 설치, 농기계(콤바인, 경운기, 이앙기, 손수레 등) 및 농자재(종자·비료·비닐하우스 등) 지원
취약 계층	영양식공장 설치 운영, 빵공장 설치 운영, 국수공장 운영지원, 육아원 운영 및 어린이 급식지원, 유아용품 생필품 지원 등

【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 】

단위 : 만달러



【 민간차원 대북지원 현황 】

(2004.12.31 현재)

연 도	규 모	내 역
'95	25만달러 (1.9억원)	- 담요 8천매
'96	155만달러 (12.4억원)	- 밀가루, 분유, 식용유 등
'97	2,056만달러 (182.1억원)	- 옥수수, 밀가루, 감자, 라면 등
'98	2,085만달러 (275.3억원)	- 밀가루, 옥수수, 식용유, 비료, 분유, 설탕 등
'99	1,863만달러 (223.6억원)	- 한적창구 : 식량 7,196톤, 비료 4만톤, 씨감자, 식용유, 라면 등 - 독자창구 : 식량 5,051톤, 비료 1,484톤, 의약품 등
'00	3,513만달러 (421억원)	- 한적창구 : 113억 2,992만원 - 식량, 비료, 한우 500두,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3개 단체 307억 3,871만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등
'01	6,494만달러 (844억원)	- 한적창구 : 286억원 - 식량 14,175톤, 비닐 552톤, 내의 159만벌,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9개 단체 558억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등
'02	5,117만달러 (641억원)	- 한적창구 : 90억원 - 동내의 118만벌, 라면 39만개, 분유, 의약품, 의류 등 - 독자창구 : 25개 단체 551억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등
'03	7,061만달러 (847억원)	- 한적창구 : 70억원, 생필품, 밀가루, 농자재 등 - 독자창구 : 29개 단체 777억원 -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 농기계 및 농자재, 유가공설비 및 축산용품, 건축용 자재 정비, 밀가루, 분유, 설탕, 의류 등
'04	12,267만달러 (1,661억원)	- 한적창구 : 441억원 - 밀가루, 분유, 발효기, 운동화, 연탄 등 - 독자창구 : 33개 단체 1,220억원 -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보일러, 학용품, 피복, 감귤, 타일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등
계	42,477만달러 (5,109억원)	

3. 용천재해 복구지원

2004년 4월 22일 오후 1시경 평안북도 용천역 인근에서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4월 23일 북한은 UNOCHA(유엔인도주의조정국), IFRC(국제적십자연맹), WFP(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들과 중국을 비롯한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사고 발생사실을 알리면서 용천사고 현장 사진과 동영상을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고 발생 당시 북한을 방문중이던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북한의 조선적십자회로부터 용천사고에 대한 긴급지원을 공식 요청받았다.



용천재해 복구물품 지원

우리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용천사고를 ‘우리의 불행’으로 인식하고 사고 다음날부

터 다방면에 걸쳐 긴급 대북지원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4월 23일 고건 국무총리는 용천 관련 비상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고를 당한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관계부처에 조속한 지원대책을 마련할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통일부, 대한적십자사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비상 지원 대책기구인 ‘용천재해대책 실무기획단’이 구성되고 세부 지원대책을 결정하였다.

한편 용천재해 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호응도가 매우 높아서 개인, 종교인, 기업가 등 각계 각층으로부터 ARS 등을 통한 성금과 물품의 기탁이 줄을 이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 정치권도 북한을 돕는데 의견이 일치되었으며,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도 사태의 긴급성을 호소하며 직접 대북지원에 나서게 되었다.

4월 26일 남북간 전화통지문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의 긴급구호품 전달계획을 북측에 통보하였으며, 4월 28일에 의약품, 라면, 생수, 모포 등의 긴급구호품을 적재한 첫배가 출항하였다.

한편 같은날 용천재해 구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의

하였으며, 북측이 즉각적으로 수용함으로써 4월 27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용천 재난구호회담」을 개최하였다. 북측은 긴급구호품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된다고 하면서 철근, 시멘트, 건설장비 등의 복구용 자재·장비 13개 품목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대북 지원활동은 긴급 구호물품보다는 자재·장비의 지원에 비중을 두면서 본격화 되었다.

10차례의 115억원 상당의 긴급구호품은 인천-남포간 정기 해운항로를 주로 이용하고, 일부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평양 순안공항으로 전달하였다. 247억원 상당의 자재·장비는 개성까지의 육로 및 남포까지의 해로, 중국 단둥까지의 해로를 경유해서 신의주까지 육로로 수송하는 등 품목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수송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북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용천 지역 복구와 주민들의 긴급구호에 큰 도움이 되었다. 북측은 8월 30일 용천피해 복구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지원물자별 분배결과를 우리측에 통보하였다. 한편 이윤구 대한적십자사 총재 일행이 국제적십자연맹 관계자들과 함께 6월 5일부터 8일까지 방북하여 용천지역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우리 지원물자가 주민들에게 분배된 상황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고로 심한 상처를 입은 북한 어린이와 주민들을 위로한 바 있다.

용천재해 지원을 위해 각계 각층에서 기탁한 성금은 170억원에 달했으며, 130억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이 기탁되었으며, 30억원 상당의 복구용 자재·장비가 기증되었다. 현금과 기탁 물품은 전부 대북지원에 사용하였으며, 부족분 31억원은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였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성금의 투명한 사용과 대북지원 경험을 널리 알려 대북 긴급재난지원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 「용천재해 지원백서」를 발간하였다.

【 용천재해 지원내역 】

구 분		금 액	세 부 내 역
정부, 적십자	긴급구호품	115억원 (962만불)	구호세트, 의약품, 식료품, 생수, 의류 등
	자재 · 장비	247억원 (2,060만불)	덤프트럭 20대, 굴삭기 5대, 휠로더 10대, 시멘트 50,000톤, 수지창 4만㎡, 피치 1,000톤 등
민간		283억원 (2,358만불)	의약품, 라면, 생필품, 담요, 의류, 학용품 등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이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양성하는 데 정착지원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지원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새터민’은 법률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 대신 써오던 ‘탈북자’라는 용어를 2004년도에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선택한 대체 용어임.)

1. 국내입국 현황

새터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0년대 초반에는 10명 내외로 매우 적은 인원에 불과했으나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3년도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4년도는 전년보다 47.5% 늘어난 1,894명이 입국하여 다시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 국내입국 현황 】

(2004.12.31 현재)

연도	'90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인원 (명)	607	9	9	8	8	52	41	56	85	72	148	312	583	1,139	1,281	1,894	6,304

▶ 국내거주 6,019명, 사망 등 285명

2. 정착지원 체계

정부는 새터민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이 남북공동체 형성의 시금석이라는 판단 아래 우리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새터민의 보호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는 현지 공관 등에서 임시 보호조치와 함께 국내 입국을 지원하고 국내 입국 후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호결정을 한다.

보호결정된 새터민은 3개월간 하나원에서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취적(就籍),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알선 등의 자립 자활에 필요한 초기 정착지원을 받게 된다.

거주지 보호지원은 새터민이 사회에 편입된 이후 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정착지원과 신변보호로 구분된다. 정착지원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사회·종교단체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학교편입·자매결연 등의 각종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다. 신변보호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새터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9개 관계부처로 구성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운영·교육훈련·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 아래에 실무협의회를 두어 유관부처간 상호협조와 사전 의견 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가. 사회적응교육

정부는 국내로 입국하는 새터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하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본원과 분원을 합쳐서 동시에 400명, 연간 2,400명까지 보호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나원은 취업 연계교육,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사·세계사 교육 등을 강화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선하고 2004년 10월부터 교육과정을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다.

하나원에서는 3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중점은 일차적으로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 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과 정서순화에 두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과 사회편입 후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새터민의 가족단위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여성·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사회진출 후 학교 및 가정생활에 바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을 위해 성남분원에서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 하나원 인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에게는 별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하나둘학교」를 하나원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연령, 학력, 출신 등이 매우 다양한 새터민들에게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여 민간 프로그램을 공모중에 있다. 현재 정규 프로그램과 주말·휴일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기회를 가질 수 있는 1일 현장체험, 지방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종교·시민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개소된 이후 2004년 12월까지 총 5,151명이 입소하여 4,703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한 후 사회에 진출하였다.

【 하나원 수료 현황 】

(단위 : 명)

연도	'99	'00	'01	'02	'03	'04	합계
입소	61	297	572	1,111	1,175	1,935	5,151
수료	60	297	572	1,111	1,175	1,488	4,703

나. 초기 정착지원

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새터민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 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1인에서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가산금은 노령, 장애 등 취약계층에게, 장려금은 직업훈련, 취업 등 자립·자활하는 자에게 각각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인에서 8인까지 구분하여 각 세대별 평형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지방 거주를 권장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방 거주자에게는 지방 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 거주지 보호

정부는 새터민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보호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노동부산하 각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새터민 취업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고,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는 등 다양한 경로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청회

를 통해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

새터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훈련의 참여율을 높이고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이 결과 2004년도에 1,000여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또한, 2000년부터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을 2년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는 새터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04년도에는 218개 사업장에 9억4천5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원이 시작된 2000년부터 총 44억4천2백만원이 지원되었다.

【 고용지원금 지급 현황 】

연도	'00	'01	'02	'03	'04	합계
업체 수	91	226	274	240	218	653
지급액(천원)	273,645	999,655	1,130,250	1,094,160	944,612	4,442,322

▶ 중복업체 제외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편·입학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주고, 사립대학인 경우 정부가 면제한 학비의 반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취득하였던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기반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총 420명이 5억7천4백만원의 대학학비를 지원받았다.

그리고 사회진출 후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사회안전망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하여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받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편입되도록 적극 주선하고 있다.

한편,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8월 1일부터 각 기

초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별 거주 현황 】

지역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인원	2,204	341	261	225	107	246	81	1,008	138
지역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계	
인원	110	177	158	149	90	95	31	5,421명	

▶ 2004.12.31 현재 하나원 등 시설보호중인 598명 제외

라. 민간지원단체와의 연계체제

거주지에서는 정부 이외에도 사회·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각종 생활상담 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다양한 특화된 지원을 해줌으로써 새터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거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접촉창구 역할 및 민간단체의 통합·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종 후원·결연단체간 네트워크화로서 1999년에 창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는 현재 총 63개 단체가 등록되어 아동·청소년, 정착지원, 지역복지, 해외 등 총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1년부터 새터민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단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현재 총 1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 정착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정착도우미제가 실시된

다. 정착도우미는 새터민의 거주지 편입 초기 지역정보제공, 생활안내 및 상담, 복지관과의 연계 등 초기 정착생활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제도 개선

정부는 법 제정 이후 7년여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입국 및 국내 거주인원의 급증 등 환경이 변화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체계 전반을 재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에 정착금 지급제도를 중심으로 한 「정착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12월에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 · 공포하였다.

【 정착지원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 분	기존 내용	개선 내용
사회적응 교육	○ 청소년 대상 별도 교육기관 없음 ○ 사회적응교육 2개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설립 ○ 사회적응교육 3개월
초기 정착지원	○ 정착금 지급 - 기본금 160배, 가산금 40배 ○ 영구임대주택 제공	○ 정착금에 인센티브 도입 - 기본금 하향(100배), 장려금 신설(50배), 가산금 상향(50배) ○ 국민임대주택까지 지원
사회 안전망	○ 생계급여 우대 지급	○ 일반인과 동등 적용
취업 · 취학 지원	○ 직업훈련 · 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미비 ○ 지원기간 불분명	○ 직업훈련 · 취업에 따른 장려금제 신설 ○ 대학지원기간 5년으로 설정 - 전문대학 등 지원가능 대학 범위 확대
거주지 보호	○ 신변보호 담당경찰이 거주지보호 업무까지 담당	○ 정착도우미제 도입 - 신변보호와 거주지보호 분리

또한, 새터민의 정착지원 시스템을 ‘보호’ 위주에서 ‘자립·자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거주지 실정에 밝은 지방과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확정하였으며, 향후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의 개선·보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제4절 북한인권·환경 개선 노력

1. 북한인권문제

민주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시하여 인권의 개념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천부적인 권리’로 정의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개개인을 단지 전체조직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만을 강조할 뿐 개인의 인권이 제약되고 있다. 또한 유일사상 지배체제로 인해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에게는 우리식의 올바른 인권기준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의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식 인권개념’에 따라 북한체제 하에서는 ‘인권이 고도로 존중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할 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생활을 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에도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와 개별국가, 비정부기구(NGO) 등에 의해 북한인권문제가 활발히 제기되었다. 2003년에 이어 2004년도에도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3.15~4.23, 제네바)는 4월 15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 내의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관한 계속되는 보고서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인권문제를 공개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다룰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유엔인권위 의장단과 협의후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할 것을 유엔인권위 의장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6월 15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특별보고관 운영을 승인하였고, 7월 11일 유엔인권이사회는 비탄 문타폰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하였다. 동 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한 뒤 2005년에 개최될 예정인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특별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중간단계로서 10월 28

일 제59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4대 인권협약 가입 등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면서 북한인권상황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광범위하게 제기한 뒤 북한당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미국 국무성은 4월 25일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9월 15일 발표한 ‘국제종교자유보고서 2004’에서는 여전히 북한을 종교의 자유가 없는 ‘특별관심대상국’ (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미 하원에서 7월 21일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9월 28일 통과된 후 부시대통령이 10월 18일 서명함으로써 발효되게 되었다. 동 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간 매년 2,400만불을 지원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며, 북한주민의 미국망명 신청시 한국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지역인권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북한인권문제는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에 맞게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측면과 남북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현실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정부입장)

-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 정부는 북한인권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선택할 수 있다고 본다.
-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 정부는 북한인권법 등이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계 개선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에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더불어 생존권과 경제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의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정리 등 정보자료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와 협조하여 매년 「북한인권백서」 및 「북한인권보고서 편람」을 발간해 왔다. 아울러 국내 NGO의 워크숍 개최 및 자료 발간 등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오고 있다.

2. 북한환경 개선

2004년은 북한의 환경개선 노력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한해였다. 그동안 환경오염 실태의 외부공개와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사업에 소극적이었던 북한당국이 2004년 8월에 UNEP 및 UNDP와 공동으로「북한환경상태보고서 2003」을 작성·발간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 분야별 북한환경 상태 】

분 야	상 태
산림환경	○ 개간, 땔감용 남벌, 산불, 산사태 등으로 산림면적 감소 ○ 90년 산림법을 제정하고, 나무 심는 날(3월2일)을 지정하는 등 산림회복을 위한 노력 강화
수질환경	○ 북한의 수자원은 풍부하나 강폭이 좁고,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움 ○ 최근 인구증가, 하수처리 부족, 산업폐수의 증가로 수질오염 심화
대기환경	○ 산업화와 높은 석탄의존도로 인해 도시 및 공단지역에서 아황산가스(SO ₂), 질소산화물(NOx)등의 오염도 증가
토양환경	○ 홍수, 가뭄, 개간, 산사태 등으로 토질저하 ○ 훼손된 토양환경 회복을 위하여 산림복구, 제방설치, 토양법 제정 등의 노력 강화
생물다양성	○ 풍부한 생물종과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산림황폐화, 토양침식, 자연재해 등으로 위협받고 있음.

자금 확보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조성을 검토하고 있는바, 정부는 신탁기금 공여를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현재 환경과 관련된 남북협력은 주로 민간단체 차원의 묘목지원, 양묘장 조성,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복구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민간단체의 환경분야 대북지원 실적 】

단체명	지원 실적
평화의 숲	○ 낙엽송 묘목 25만본, 종자흙떡 163,500개, 종자 50kg, 기타 양묘용 자재('04.4) ○ 솔잎혹파리 방제관련 자재 및 고성군 양묘장 조성관련 자재 16종('04.6) ○ 태양광 발전설비 및 평양 순안양묘장 조성관련 자재('04.7) ○ 금강산 고성군 지역 2차 온실 및 노지 양묘장 조성 관련 건설자재('04.11)
남북강원도협력회	○ 솔잎혹파리 및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약품 등 방제관련 자재 26종('04.5) ○ 잣나무넓적잎벌 방제약품 등 방제관련 자재 10종('04.6)
대한적십자사	○ 잣나무 묘목 30만주('04.3)

최근 당국차원에서는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임진강 주변 산림복구 지원사업을 위한 묘목지원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 이는 남북 당국차원에서 추진되는 최초의 산림복구 사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 주도로 산림분야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간 환경협력 사업을 산림·수질·대기·토양·생물다양성 분야로 확대하고, 당국간 직접적인 환경협력 사업을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과도기적 과정으로 UNEP나 UNDP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남북환경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남북 환경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